



보건복지동향

2005. 11. 22 ~ 2005. 12. 20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임.
- 편집자 주 -

정부, 겨울철 “서민생활 안정 관련대책” 적극 추진

정부는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11.22일(화) 프레스센터에서 제19차 「사회문화정책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동절기 서민생활안정대책 등에 대한 대책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겨울철 서민들의 생계 및 고용문제가 더욱 어려워지는 계절을 맞아 동절기 서민생활 관련 대책을 6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였다.

◆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

- 보건복지부는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저소득층 중 전기·수도·가스료 체납자에 대해 '05.11~'06.3월 동안 한시적으로 공급중단을 유예하고, 전년도에 이어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 공급(50%)을 계속하되 홍보를 특히 강화하기로 하였다.
- 금년 9월~11월까지 특별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 소액납부자, 차상위 계층 등 중점관리 대상가구에 대해 수급자로 선정 보호하기로 하였다.
- 동절기 전에 65세 이상 노인 및 기초생활 수급자 등 인플루엔자 고위험군 약 300만명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 취약계층의 겨울나기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하여 저소득 아동 중 희망자 전

원(22만명)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체계적 사업지원을 위해 시군구별로 아동급식위원회를 설치하였다.

- 겨울철 독거노인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보건소와 노인복지관의 방문활동을 강화하고 119 자동신고기 보급을 확대하며 결연사업 추진본부를 중심으로 독거노인 결연사업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 민관이 함께하는 이웃사랑 나눔운동

- 「1기관 1프로그램 사랑나눔 실천운동」을 적극 발굴·지원하며 「2005 행복한 겨울만들기 지원사업」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이웃사랑 나눔운동을 적극 추진한다.
- 거리노숙인 이동상담 및 현장순회 확인팀을 지자체별로 구성, 밀착상담을 실시하고('05.11~'06.2) 쉼터 및 쪽방거주자에 대한 보건소 건강검진 및 결핵협회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전국 4개소에서 거리노숙인 무료검진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금년 11.1일 개소한 보건복지콜센터의 희망의 전화 129를 최대한 활용하여 동절기 긴급지원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할 계획이다.
- 아울러 중앙과 지방에서 “동절기 사회안전망 점검대책반”을 구성·운영하며 사회복지시설 등 복지현장에 대한 상시점검('05.12.15~'06.2)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시골과 저소득층 여성 비만 심각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가정의학과 오상우, 윤영숙 교수팀은 공동 연구 결과 “도시지역보다 시골지역 및 저소득층 여성비만이 더 심각”이라는 사실을 발표하였다. 연구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2001년과 2003년에 시행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 조사결과, 여성의 경우는 가구당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비만 환자가 더 많은 반면, 남성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남성은 주거지역 분류에 따른 비만율이 큰 차이가 없었지만, 여성의 경우는 광역시나 도시에 사는 여성들보다 군(郡) 이하의 시골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더 비만한 것

으로 나타났다.

- 광역 시도별로는 강원도, 제주도, 충청남도, 경기도가 비만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제주도의 경우, 남성의 비만율은 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이는 반면, 여성의 비만율은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였다. 서울광역시도 남성의 비만율이 높은 반면 여성의 비만율은 낮은 양상을 보였다. 비만율이 적은 지역으로는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등으로 조사되었다.
- 이번 조사를 통해 도시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의료환경이 좋지 못한 군(郡)지역에서 비만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남성은 차이가 없는 반면 여성은 시골지역으로 갈수록 더욱 비만해지는데, 이의 원인으로 시골지역의 여성들이 비만에 대한 인식과 치료 및 예방의 필요성을 덜 느끼고 있고, 또한 관련 의료 및 사회체육시설이 부족해서 생긴 현상으로 연구진은 추정했다.
- 여성의 경우는 비만에 대한 관심이 남성보다 많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비만의 치료와 관리에 보다 더 많은 시간과 관심 그리고 노력을 기울일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러한 여유가 적은 저소득층의 여성이 비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 이러한 저소득층 여성에서의 비만 유병률이 높다는 사실은 미국, 유럽 등의 서구에서의 보고와 일치한다.
- 건보공단은 지금까지 도시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진 비만에 대한 관심과 접근을 의료환경이 열악한 군 이하의 지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저소득층 여성들의 비만관리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12월 1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12월 1일(목)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는 경찰청, 지자체와 합동으로 각종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12월 1일부터 10일간 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이번 점검은 동 법에 의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 등을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고(제7조) 위반시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 시행의 실효성 확보 및 향후

정책 수립시 반영을 위해 실종아동 등을 보호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각종 복지시설 (미신고시설 포함)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 또한 동 법에 의거 실종아동 관련 업무위탁운영기관으로 공모 선정된 실종아동전문기관 (한국복지재단)도 이날 개관한다.
- 이날 개관 행사에서는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차관, 경찰청 관계자,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한국복지재단 회장, 실종아동 부모등 50여명이 참석하여 개관축하와 격려메시지를 전하고,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사업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손씻기 실태조사 결과

전염병의 70%는 손 씻기를 통해서 예방이 가능하지만, 국민들의 인식과 실천이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국민건강증진과 전염병예방을 위해 지난 7.6(수) 25개 단체가 힘을 모아 범국민 손 씻기 운동본부를 발족하였다.

범국민 손 씻기 운동본부는 손씻기 운동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손씻기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 14세이상 국민 1,000명에 대한 전화조사와, 전국 7대도시 공공화장실 (공항, 터미널, 역 등)이용자 2,800명에 대한 관찰조사로 구성되었으며 그동안 일부 소규모 조사는 있었으나 전국 규모의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수행은 (주)현대리서치에 의뢰하여 '05.10.6~8일 사이에 실시되었다.

- 전화설문에 응답한 사람들의 77.6%는 ‘손 씻기가 질병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으나, ‘자주 손을 씻는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47.9%에 불과하였다. 전화설문조사에서는 94.2%의 사람이 공공화장실 이용 후 ‘항상 또는 대체로 손을 씻는다’고 응답하였으나, 관찰조사결과 63.4%만이 실제로 손을 씻는 것을 나타냈다.
- 관찰조사 결과 주위에 사람이 있을 때는 74.3%가 손을 씻는 반면, 사람이 없을 때는 49.7%만이 손을 씻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여자보다는 남자들에게서 더 두드러진다.
- 공공화장실에 대한 관찰조사 결과 손을 씻는 비율은 남자(54.6%)가 여자(72.1%)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전화면접을 통해서 확인한 평소의 손씻기 습관과 손씻기에 대한 인식에서도 일관되게 발견되었다.

- 이번 조사결과를 선진국의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국민들의 손씻기 실천률은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손을 잘 씻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습관이 안되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39.6%), 다음으로 ‘귀찮아서(30.2%), ‘씻을 장소가 없어서(7.5%), ‘비누가 없어서(3.8%)로 조사되었다.
- 손씻기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1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국민들의 많이 걱정하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도 손 씻기를 생활화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손 씻기는 더욱 중요해졌다.
- 질병관리본부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손 씻기에 대한 인식도와 실천률 제고를 위해 범국민 손 씻기 운동본부와 함께 전국적인 캠페인을 앞으로 더욱 활발하게 진행 할 계획이다.
- 우선적으로 손 씻기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사업과 올바른 손씻기 습관 형성을 위한 저학년 학생 교육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 '06년에는 국민건강증진기금 1억원과 참여단체에서 조성한 민간기금 1억원 등 도합 2억원을 손 씻기 운동에 투입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응급실” 마련된다

소득, 재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로는 보호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내몰린 경우 정부가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의 사망, 가족의 중한 질병으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지출 등으로 저소득층이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에 처한 경우 이를 적시에 발견하고 현장확인만으로도 생계비·의료비 등을 선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복지지원법안을 의결하였다.

- 긴급복지지원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이

- 확인된 저소득층에 대하여 별도의 사전 조사 없이 현장확인만으로 선지원하고 사후에 지원이 적절하였는지를 조사하도록 하였으며 생계·주거지원 등은 최대 4월, 의료지원은 최대 2회까지 지원하게 된다.
- 예컨대, 그동안 빠듯한 살림살이에 몇천만원짜리 전셋집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생계를 모색할 동안 정부로부터 최대 4개월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또한 긴급지원대상자의 조기발견을 위해 의사·교사·사회복지시설 종사자·복지위원 등에게 신고협력의무를 부과하며, 이 법에 의한 지원 후에도 계속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뿐만 아니라 관련 민간기관·단체와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선정기준의 엄격성과 선정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저소득층에게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대하여 적시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 비해, 긴급지원제도는 지원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을 탈출하게 돕는 것이 그 핵심이라 하겠다.
- 보건복지부는 시행령·시행규칙제정을 통하여 제도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비하고 관련 민간기관·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모색하는 등 내년 3월부터 시행될 긴급지원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준비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전국 어디서나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는 보건복지콜센터(129) 설치와 더불어 병원의 응급실에 비유할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도입으로, 저소득층이 처하는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극단적인 생계형 사고, 가정해체 또는 만성적인 빈곤으로 이어지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희망의 전화 129, 3천명에게 해피콜 걸어

- 129 개통 1개월 맞아, 국민에게 더욱 다가가고자 -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전화 개통 1개월을 맞아 129번과 동일한 숫자인 12월 9일이 포함된 주일 동안 11월중에 129번을 이용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3천명에게 해피콜(Happy Call)을 실시한다.

- 콜센터 상담원이 자신과 상담한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희망의 전화서비스에 만족했는지, 최근의 근황은 어떤지 묻고, 또다른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담과 함께 동절기 서민생계안정대책 등 최근의 시책도 안내한다.
- 보건복지콜센터는 앞으로도 희망의 전화 이용자에게 정기적으로 해피콜을 걸어 지속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에게 더욱 다가가고자 한다.

◆ 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시책에 관한 문의 많아

- 11월 1일 이후 한달동안 18,808통의 상담전화를 받았으며, 콜센터에서 관련기관에게 사실을 확인하고 고객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7,596통의 전화를 걸었다.
- 상담내용중에는 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시책에 관한 문의가 13.4%를 차지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의 복지혜택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한다.

◆ 군포시 거주 40대 여성의 13층 투신자살을 막기도

- 군포시에 거주하는 40대 홍모씨가 아파트 13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려는 것을 상담원이 차분하게 전화응대를 하며 관할 경찰지구대가 바로 출동하게 해 귀중한 생명을 구하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유도하였다.
- 성남시 모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박모양이 가정형편을 비관, 어머니의 당뇨병 치료제를 과다복용하여 입원하였으나 병원비가 없자 경기도 저소득층 응급지원사업 대상으로 추천하여 응급지원금 100만원을 받도록 하였다.
- 심장관련 수술 후 집중치료를 받아야 하는 신생아의 진료비 문제로 고민하는 아버지에게 올해부터 실시되는 건강보험 진료비 감면제도를 안내하여 매우 고맙다는 인사를 받는 등 보건복지시책을 잘 모르는 국민에게 피부에 와닿는 도움을 주었다.

◆ 기억하세요, 희망의 전화 129

- 보건복지콜센터는 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의 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129번 알리기 행사를 진행한다.
- 12월 6일에는 아동복지학을 전공하여 평소 복지에 관심이 많았고 희망의 전화 홍보 동영상 제작 등에도 참여한 방송인 이익선씨와 불치병 환자를 위한 자선 바자회에 참가하는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텔런트 권오중씨를 129 홍보대사로 위촉하였다.

- 12월 9일에는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중 소외계층 18만명에게 SMS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자신이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있을 경우 129로 전화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6년도 건강 보험료(율) 3.9% 인상 합의

보건복지부는 12.6(화)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약칭 건정심)에서 2006년도에 적용할 보험료를 결정하였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4.31%에서 4.48%(0.17%p 증가)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26.5원에서 131.4원(4.9원 증가)으로 전년대비 3.9% 인상된다.

- 이번 보험료 결정과정에서 정부, 가입자 단체 및 공급자 단체가 참여한 보험료조정소위원회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 필요성과 최근 국내경기 및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감안한 보험료 인상의 최소화 요구를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
- 그러나, 2005.7월 발표된 바 있는 2008년까지 급여율을 70% 이상 달성을 위한 2005.7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로드맵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의약단체장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05.11.15일 합의한 수가인상을 3.5%를 감안할 때, 적정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 특히, 내년부터는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급여확대, 6세미만 아동의 본인부담금 면제 등 이미 확정된 1조 5,000억원 규모의 보장성 확대에 따라 본격적인 재정지출이 발생하고, 식대에 대한 보험적용, 암,심장,뇌혈관질환 등 3대질환에 대한 PET(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초음파 적용 등 약 1조원 규모의 보장성 추가확대가 있을 예정이다.
- 결국, 보장성 확대는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5년도 말까지 예상되는 법정 준비금을 일부 사용하여 2006년도 보험료 인상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끝에 3.9% 인상하기로 건정심 전원합의로 결정하였다.

국민연금, 전액지급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제도 중 다수민원이 발생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지적되던 사항들을 개선한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2일 입법예고한다.

- 우선 종전에 근로자의 경우 60세 이후 월 42만원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거나 자영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면 연령에 따라 일정비율(10~50%) 감액된 연금을 지급하던 것을, 월소득 15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그 이상인 경우에만 감액연금을 지급한다.
- 60세 이전 연금 수급시 월소득 42만원 이상인 경우 급여지급을 정지시키던 것 역시 상향조정해, 노인계층의 연금수급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노령 근로유인을 강화하게 됐다.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약 32,000여명이 추가로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05년 9월 기준)
- 또한 연금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부과하던 연체금가산기준을 완화하여 종전에는 납부기한 경과시 5%를 가산한 후 3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5%씩 추가로 가산하여 최고 15%까지 부과하던 것을, 최초 3% 가산 후 1월 경과시마다 1%씩 가산하되, 최고 9%까지만 가산하도록 하여 체납자의 부담을 상당 부분 경감하였다.
- 한편, 본인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농어업인 확인절차도 간편해진다. 농지원부, 축산업등록증이 있으면 별도의 농어업인확인서 제출없이도 농어업인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이밖에 국민들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제기하던 이의신청 절차인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절차에 대해서도 심사위원회 위원을 대폭 확대(10인→20인)하는 등 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되, 청구인의 실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한 정확한 권리구제가 되도록 개편하였다.
- 이 외에도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공단에 보험료 등을 잘못하여 과다납부한 경우 공단이 이를 반환할 때 이자를 가산할 수 있는 경우와 범위를 확대하는 등 국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많은 사항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개정안에 담고 있다.
- 이번에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은, 그동안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 「국민연금 옴부즈만」을 통해민원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안을 마련한 것으로 국민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불만을 줄이고, 신뢰할 수 있는 국민연금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법 개정내용과 크게 관련되지 않은 사항 위주로 우선

적으로 추진된 것이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12.12~1.2) 동안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등을 통해 일반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성 B형 간염 치료제 보험급여 확대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간질환 사망률이 높고, 간염의 적정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간경변 등으로 발전할 가능성 등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항바이러스제(제픽스정, 헵세라정)의 급여기준을 12월 15일부터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하였다.

- 간질환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9.1명(사망원인 6위), B형 간염항원양성률 4.38%로 적정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5~30%이 간경변,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
- 앞으로 만성 활동성 B형 간염바이러스 감염증환자의 바이러스 증식억제제인 제픽스정(Lamivudine 100mg)의 경우 현재 2년간 보험급여하던 것을 보험기간을 삭제하여 GPT(또는 GOT)가 80이상의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기간에 제한없이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 또한, 만성 활동성 B형 간염바이러스 감염증환자의 치료제인 헵세라정(Adefovir Dipivoxil 10mg)은 치료 효과가 높고 내성바이러스 발현율도 최소화할 수 있는 약제로서, '04. 10월 등재당시에는 신약으로 치료기간 및 치료종료시점 등의 판단이 곤란하여 제픽스정 내성 환자에 한하여 1년간 보험급여를 인정하던 것을 GPT가 80이상인 경우에는 2년까지 보험급여를 확대한다.
- 이와 함께 간이식 환자의 경우에는 이식전 2년 외에 이식후 간염재발 방지를 위하여 추가로 1년간 보험급여를 인정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06. 1. 1일을 기준으로 제픽스정과 헵세라정의 상한금액을 각각 10%씩 인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제픽스정의 경우 3,798원 → 3,418원으로 헵세라정 10,500원 → 9,450원으로 인하된다.

담배가격 인상정책, 청소년에게 더욱 효과적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는 최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교수 권순만)에 의뢰하여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전국의 중고등학생 13,279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흡연실태를 실시 한 결과 담배가격 인상정책이 특히 청소년에게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 담배가격 인상 6개월 이후 흡연 청소년의 11.7%가 금연을 하였고(고려대 조사(2005)에서 성인은 11%가 금연), 20.5%가 흡연량을 줄였으며, 비흡연 청소년중 9.5%가 담배가격 인상으로 흡연을 시도하지 않는 계기가 되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밝혔다.
- 또한 청소년의 담배수요 가격탄력도는 -1.56(남자 -1.34, 여자 -1.90)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우리나라 성인의 담배수요 가격탄력도(고려대 김원년 교수(2005) : -0.39)에 비해 4배 이상 높아 청소년이 성인에 비해 담배가격에 더 민감하다는 외국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 중학생의 담배수요 가격탄력도는 남녀 각각 -1.80, -2.26으로 고등학생 남녀 각각 -1.15, -1.67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 담배수요 가격 탄력도 -1.56의 의미 : 담배가격을 10% 상승시키면 담배수요는15.6% 감소
- 참고로 청소년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금연정책을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15.6%가 담배가격 인상정책이라고 응답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 담배가격 인상정책이 청소년의 금연뿐 아니라 청소년의 흡연예방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흡연억제 차원에서 추가적인 담배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구세군과 함께하는 연말연시 금연캠페인 전개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이웃과 함께 하는 “사랑의 금연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금번 금연캠페인은 모금함을 설치하여 흡연자가 담배를 버리고 금연하도록 유도하고, 흡연자가 버린 담배 1개비당 100원 씩을 적립하여 이를 불우이웃에게 전달하는 이색 금연 캠페

인이다.

- 이는 <금연으로 지키세요, 나의 건강 / 금연으로 전하세요, 이웃 사랑>이라는 주제로 구세군과 함께 전국 5개 도시(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서 12월 16일(금)부터 24일(토)까지 9일간 전개할 예정이다.
- 캠페인 마지막 날인 24일(금)에는 청계천 광장(예정)에서 그동안 모금된 담배를 폐기하고, 모금된 담배를 통해 적립된 모금액을 구세군에 전달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금번 행사가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금연결심도 하고, 금연으로 불우한 이웃도 도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간접흡연 예방 포스터 등 10만여부 제작 배포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는 간접흡연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자발적으로 실내 전면 금연을 선언하고 실천해 온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금연실천 우수업소」로 선정하고 「담배연기 없는 좋은 식당」명판을 부착한다고 밝혔다.

- 해당 업소는 늘부(500개), 포호아(베트남쌀국수, 20개), 정성본 샤브샤브(30개), 스카이라크 패밀리레스토랑(13개), 명동칼국수(60개), 델리(인도카레전문점, 11개), 봉추짬뽕(30개), 스키캘리포니아(30개), 소렌토(스파게티 전문점, 100개) 등 총 800여개이다.
- ※ 국내 최대 외식업체중 하나인 (주)늘부의 경우, 2003년 금연선포식을 갖고 전국 가맹점 500개 업소에서 '실내 전면 금연'을 실시
- 아울러 비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흡연자의 금연결심을 유도하기 위한 간접흡연예방 포스터 3종과 금연포스터 1종 등 4종 10여부를 제작하여, 전국 공공기관과 버스터미널, 기업체, 식당 등에 부착하기로 했다.
- 특히, 성인남성을 대상으로 한 금연포스터는 전국 100대 기업 및 1만여개 중소기업체 흡연실과 사내 곳곳에 부착한다.

차상위 등 저소득층 70천가구 127천명 신규 지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체납(소액납부 포함) 92천가구, 전기·수도·도시가스 공급중단(체납가구 포함) 186천가구 등 총 380천가구를 대상으로 '05. 9월부터 조사를 실시하여 70,430가구 127,228명을 신규 보호했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를 통해 15,822가구 28,394명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이에 해당되지 않지만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 54,616가구 98,834명에 대해서는 경로연금이나 차상위 의료급여 등의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원했다.
- 이에 따라 이번에 선정된 수급자는 생계·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등을 새롭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이번 조사결과 그동안 실제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던 저소득 계층을 보호함으로써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복지부는 동절기 단전·단수·가스공급중단 유예조치,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지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내년도에도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보호하되 기존 수급자중 부적정하게 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호중지하여 건강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중점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